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90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6일

발 의 자 : 전경원 의원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윤영애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다.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라.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 각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일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의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대구광역시교육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input type="checkbox"/> 위탁형 <input type="checkbox"/> 공동연구형 <input type="checkbox"/>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역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역 개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탁자 :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인자		비고
			○○팀장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치 사항	○ ○ ○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정책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 용 및 계획일정부 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 능성(정책 반영 가 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